

제323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2014년4월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성준) 인사청문경과보고
- 2. 경제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성준) 인사청문경과보고 1
- 2. 경제에 관한 질문 2

(10시10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성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철래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성준) 인사청문경과보고

(10시12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성준)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조해진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성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의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준법성 등을 검증한 뒤 4월 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가운데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질의와 답변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에 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28년간의 법관으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합의제 기구이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방송통신 관련 분야의 경력과 특허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높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등 공직

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 주었고, 평소 온화하면서도 끈은 성품으로 소통을 중시해서 법원 안팎의 고른 신망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역량 및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적격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와 무관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방송통신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부족하고, 민영방송사에게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수호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납부하고도 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준법성·도덕성이 부족하므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성준)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조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16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달성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이종진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던 기존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주도의 맞춤형 패키지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정책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가 수도권 완화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진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규제해 놓은 것을 완화를 한다면 지방에 사실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지난해 6월에 본 의원이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선지역발전 다음에 수도권 시책 개선을 원칙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역발전 시책과 연계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검토해 드린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런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 완화를 추진을 하면서 공장이나 상업 시설을 들어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해제된 자연 취락 106.2

km² 중에 수도권이 33%로 해제 지역의 용도 변경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투자 편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게 아닌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바람직한 규제 완화와 또 그렇지 못한 규제 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완화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정신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지역 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지주들은 금번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 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 의원** 그런데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이나 또 도시 주변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43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는 도시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산림정책의 다변화로, 연료정책의 다변화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울창한 숲들이 조성이 돼서 지정 목적이 해소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 제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은 아직도 유지할 필요성은 많이 있기 때문

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라든지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를 하시다 보면 주민 지원 대책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43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이 부분도 해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통령께 실질적으로 해제할 의향이 있는지 건의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 주든지, 그렇지 못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주민들에게 목적세라도 실제 신설을 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수라든지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13일에 남부권 신공항의 수요조사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주민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남부권 신공항을 잘 추진하고 있구나’ 하고 기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장후보자들이 입지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언론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대통령께서는 남부권 신공항 입지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덕도가 좋으면 가덕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입지조사가 용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 부처 간에 또 지역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지는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하는 의지를 남부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갈등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수요조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용역 추진 방법에 대해서 영남 5개 지자체 간에 사전합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기운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주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다음은 대기업 지역분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대 기업 본사 91%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또 지방대학들이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대기업을 선호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고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야구나 축구처럼 30대 대기업들을 시도별로 하나, 두 개씩 연고지를 정해 줘 가지고 신규 투자 시에 연고지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대기업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 대안 마련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지역균형발전을 바라시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유도를 하고 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갖도록, 지역투자 의욕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총리님 말씀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가 매우 어렵고 또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울산광역시도 가장 소득이 높은 것도 울산 현대자동차나 또는 울산 정유공장이 있기 때문에 GRDP가 제일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항상 머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대기업을 본 의원은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먼 미래를 보고 지역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총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8일 국내 신용카드 3사인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3월 6일에는 KT에서 고객정보 1200만 건이 유출되었음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2월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금융위원장님께서서는 1차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후에 시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서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4일에 신용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8000만 건 이상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는 검찰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2차 유출은 없다’는 관계기관장들의 발언은 공언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카드를 바꿔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바꿔야 할 것인지 대단히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존경하는 이종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로 불편과 또 여러 가지로 불안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의 검찰 발표에도 있듯이 이번 2차

개인정보 유출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1차 때하고 상당히 동일하고 또 카드의 비밀번호나 또는 CVC값 등이 유출되어 있지 않아서 유출정보만으로는 카드 위조가 지금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유출에 의한 불안감으로 카드의 재발급 또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앞으로 유출된 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또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총리님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우선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스미싱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는 아예 정지하도록끔 그렇게 대응책을 구축하고요. 또 신용카드 위조 등 부정사용에 대비해서 결제를 확인하는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피해가 발생할 때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토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공동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시장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 이외의 개인정보 일반에 관해서는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상반기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총리님,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사업을 추진 시에 경제성 분석이 1 이상일 때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분석 방법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낙후지역 판

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익 항목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 경제성분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종합적 분석을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종합적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추진을 하는 여부는 경제성분석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인구나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편익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 위주로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실제 시급한 사업들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종진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재정지출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B/C 분석이라고 경제성분석만 하다가 그 이후에 소위 종합적인 검토라는 AHP 분석이라고 그래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 그리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하신 지역균형발전 이런 요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의 부분에 대한 비율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개선의 여지를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예, 부총리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7년째 2만 불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쳐 있으며,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지역균형발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3년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수출 호조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 2만 6000달러는 연구개발 투자와 예술품, 무기 구입분을 자산에 반영한 데 따른 통계 착시 현상이지 실질적인 경제상황이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금융부채 장기연체자가 34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 총리도 참석하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완벽하게는 못 했지만 최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방송사가 유례없이 7시간 동안 생중계를 했지만 내용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정작 당사자의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말잔치만 요란했지 중요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규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될 규제와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풀어서는 안 될 규제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쓸데없는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풀어서는 안 될 규제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암덩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등포 호텔 신축 건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신축 호텔 예정지역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영등포 호텔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좀 논란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학교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대통령께서 지목한 영등포지역의 호텔부지는 관광객이 모여드는 관광지역이 아닙니다. 상권 밀집지역도 아닙니다. 인근지역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당산초, 한강미디어고, 선유초·중·고등학교 등 3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호텔이 들어서서 교육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85%를 넘습니다.

그날 TV를 지켜본 많은 영등포 주민들께서는 규제를 풀어야 될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 호텔 문제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총리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환경이 파괴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게 만드는 규제 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행부가 영등포구청에 권고를 하여 지난 4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호텔 예정부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행부가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술집 등 유해시설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작년 10월에 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께서도 술집들, 유흥시설이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영등포 주민들은 영등포 관내에 있는 다른 관광호텔들이 러브호텔로 변질되고, 주변업소가 유흥업소로 넘쳐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영등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김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등포갑지역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는 술집들, 유흥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던 영등포 소재 대규모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으로 변했지만 용도는 아직도 준공업지역입니다.

자료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등포갑 지도입니다.

저 붉은 지역이 전체 준공업지역입니다. 영등포갑 전체 면적의 80%가 넘습니다.

이로 인해 영등포갑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장지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공장 과 아파트, 술집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근 200m 내에 유흥시설과

호텔을 짓지 못하게 현행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암덩어리로 표현하신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이고 술집 등 유해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1962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60년간 변경되지 않고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는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년간 규제로 묶여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준공업지역이야말로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허가 조건에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 총량에 대한 설정이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60년 동안 규제를 안 풀었습니다. 이게 풀어야 될 규제입니다.

만약에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그렇게 관광호텔이 들어서도 그 주변에 단란주점이나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데, 그걸 대통령께서 나서서 암덩어리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본 의원의 요청으로 국토연구원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준공업지역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총리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한바 추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그런데 지난 3월에 정부에서는 2차 유출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들을 속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수사 상황과 또 그때까지 피해 접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당시 상황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개인정보 유출 정말 심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올 한 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것만도 약 3억 3000만 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최대의 수출품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라는 우스갯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한 포털사이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고 또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유통과 활용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해외에 넘겨져 중국에 서버를 두고 보이스포싱이나 스미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는 해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을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인터넷진흥원과 중국 인터넷협회 간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

국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지금 정부의 검·경 단속에 의해서 많은 유출되어 있는 사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완전히보다는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님,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것 저희 의원실에서는 파악했습니다. 국내 한 미디어와 해킹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4년간 중국과 미국의 포털사이트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검색해 봤더니 약 1400만 명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 대학교 사이버강의를 수강한 전·현직 교사 등 1만 2000명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엑셀 파일이 유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많은 양이 유출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의원실에서 4시간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 전체 양을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추단하고 만들어 낸 그것을 공인된 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님, 정부에서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들에 대한 회수와 차단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또 개인 기업까지도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태 파악과 검·경의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전부 몽땅그러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 국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게재, 유통, 활용을 금지하도록 국가 간에 긴밀한 상호협조를 구축하고 하루빨리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고 차단해서 우려되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사이버 방공망도 구멍이 뚫렸다’, ‘군 보안문건 대거 유출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대로 국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이 질문서 미리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제가 방금 받았습시다마는 아침에 보도 등이 되어서 충분히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영주 의원 기사 내용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방과학연구소, 총리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요.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병기 장비,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개발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해서 국가안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국방부 산하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무인정찰기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 정밀 검사한다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합동 기구에 의해서 지금 감식하고 있는 것으로……

○김영주 의원 왜 걱정스러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해외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 유출되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모 대학에서 생성한 자료입니다.

구글 포털 사이트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검색하게 되면 관련된 엑셀 파일이 검색되고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등 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 엑셀 시트

가 나타납니다.

본 의원실에서 유출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접속을 시도해 봤더니 로그인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이메일까지 다 들여다보게 될 수 있어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민감한 미군기지 이전 자료와 군 장성과 전사자 명단부터 육·해·공군, 경찰 관련 자료가 종류와 양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정보와 함께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널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보에 무능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희는 이것이 아침에 보도가 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산업기술대학의 수강생 중에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교수가 이들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ID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출되어서 지금 나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것 심각합니다.

총리님, 오늘 파악하셨다고 그러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확하게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총체적인 불감증 정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개인정보 유출이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동아일보에서 오늘 보도되었던 것 중에서 ‘정보화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 제안요청서’, 그다음에 ‘정밀부품 명세서’라는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다고 해 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국방 기밀이 나간 것처럼 됩니다만 이것은 공개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 그러면 실무자가 그렇게 해 주셨는지 몰라도 육·해·공군 장성의 자료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자료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까?

저희 방에서 확인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 이것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모든 주민등록번호나 ID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의 폐기나 재정비 권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권고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러면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1월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방안을? TF를 1월에 구성해서 지금 4월 달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숨어 있던 것을 전부 노출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경로로 이것이 흘러나왔는지 하는 것을 파악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3억 건이 넘는 국민 정보가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회수하거나 유통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인 식별번호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345만 명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250만 명, 금융기관의 저신용

자가 333만 명에 달합니다. 약 900만 명 이상이 금융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5만 명을 지원했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 줄이겠다고 했지만 세부 계획을 보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부총리,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규제 완화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입니다.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대책이지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우선 정부도 이러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하고 또 가계부채가 내수의 큰 제약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세 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가계부채의 그러한 비율을 5%p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복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출의 구조를 바꿔 준다든지 또는 대출에 대한 상환을 도와 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끝으로 지금 많은 경우의 가계부채 내용을 보면 그 대출의 구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단기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시에 상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그러한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계대출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돼서 소득과 고용이 늘어야지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검토에 따라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전월세 대책,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한 그런 것은 정부의 보여 주기식 단기 대책입니다. 그리고 재탕에만 급

급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손발도 맞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해야 된다고 하고, 금융위는 가계부채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총체적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서민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서민경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서민경제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도 그동안에 경제가 다소간에 회복이 되고 또 그러한 거시지표의 개선은 있지만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고용이라든지 여성 고용,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어떤 체감의 경기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안하신 어떤 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현재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국무회의 검토 또 각 부처 간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 여부는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정부는 이벤트성의 설익은 정책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서민경제위원회를 설치해서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도 대기업 규제 완화에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서민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그러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대기업을 위한 그런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 앞서 영등포 호텔 부지, 경제 쪽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85%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부지입니다. 준공업지역이라서 유희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규제 완화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 간에 좀 더 충분한 그러한 협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가 범외에 악용되지 않을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7시간씩 생방송 토론회를 해 가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를 출신의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 원주를 출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와 민간 소비폭의 감소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나아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기업 실적은 나빠지고 있으며 신흥국발 경제위기설과 중국발 경제리스크 같은 대외적인 악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가 갈망하는 국민소득 5만 불의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서독의 마지막 총리이자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헬무트 콜 총리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연설에서 '지금 통일열차가 오고 있는데 타

지 않는다면 그 열차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와 독일 드레스덴 방문은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남북 통일열차를 타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결단을 전 세계에 표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인식과 통일 구상에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통일이 한반도에 미칠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주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리께서는 노프(NOOMP)현상을 아시지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필요 재원에 대한 부담은 원치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예, 맞습니다.

노프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 비용이 이익보다 클 것 같다는 응답은 48.6%로 절반 정도인 반면에 이익이 더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3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골드만삭스의 짐 로저스가 통일한국은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한반도 통일은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또 경제 인력이 증가되고 국가 간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한국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도약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후 의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에 1.9%에 그치는 반면

에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에 2.6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통일한국의 2050년 1인당 GDP가 7만 불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대박론도 바로 그런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정부도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강후 의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일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조사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55조, 어떤 경우에는 270조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통일에 따른 비용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방안을 기재부와 통일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더욱 이 연구가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그렇다면 그 통일의 편익, 즉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적 효과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산하는 것은 대체로 통일비용의 한 2배 정도 아니겠느냐 하는 추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일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정부 용역으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 이런 기능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국민 모두가 한뜻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비용과 편익을 구체화시키면서 통일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번 밝혀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젊은 세대, 바로 통일시대의 주인공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재를 다양화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또 드라마 제작,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러면 다음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는 장관 책임하에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중요 규제에 대해 실국장을 불러 가지고 일일이 규제 완화를 검토해서 추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담당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경제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하도록 하고, 경제부처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의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제가 나서서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따라서 각 부처의 규제들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해결토록 하고,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정도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요 주요 소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처 평가에 반영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런데 지자체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규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한 5만여 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숨어 있는 규제는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총리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중앙부처 규제는 약 1만 5000여 건, 그리고 지방자치 규제는 5만 2000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

는 규제가 3.4배 많습니다.

지자체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많이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게 지원하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규제 개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든지 정부 포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저도 공직에 있어 왔지만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나 그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들어와 가지고 간단한 인허가의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만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공무원이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 판단이 모호할 때는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감사원에다 떠넘겨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감사원의 고유 기능의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지책이지만 얘기를 해 본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제도적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이강후 의원** 다음은 정부가 규제개혁 조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후 의원** 그리고 총리께서는 2003년 이후 수도권 내 그린벨트가 얼마나 해제됐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제 지역이 총 35.4km²이고, 전국 해제 지역의 3분의 1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장 등 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도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면 대부분의 기업체는 인력 확보 또 물류 등에서 당연히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게 돼서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국고보조율과 지방 기업 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지원도 매년 5%씩 축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실제로 MOU까지 맺으며 지방 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정부정책이 또 바뀔지 모른다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즉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업 이전을 갈망하는 지자체들은 맨붕에 빠진 상태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본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동의합니다.

○**이강후 의원** 총리께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문제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안을 마련하셔서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후 의원** 2014년 국토부 업무계획과 제5차 무역투자확대회의에서도 이를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난 3월에 5개 대상 지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지역별로 산단의 유형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위치는 어디로 갈 건지,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사업시행자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지금 5개에 대해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산단은 몇 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예단하지 않고 타당성이 있는 지역은 전부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렇습니까?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의료기기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고용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현재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인 39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 구조를 보면 대구와 오송의 첨단복합단지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의료기기 부품생산단지는 구미에 조성되어 있는데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할 전용 단지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산업도시인 원주는 1988년부터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생산 거점이자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기반이 마련된 곳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생산의 21%, 수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에 국제적인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샌디에이고나 독일의 튀틀링겐 같은 의료기기 전문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위치는 어디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다음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몇 개나 건설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10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작년까지는 지역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종전 부동산 매각이 조금 부진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전기관이 총 151개인데 금년에 75개 이전 예정으로 있고, 16년까지는 완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사실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조금 늦은 점은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대로 제대로 오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이전이 완료된다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리고 장관께서는 이렇게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전국 혁신도시 건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한 가지 틀로서 그것을 어떤 클러스터링화해서 선도적인 지역발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 출신들을 많이 채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역인재를 고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후 의원** 그래서 작년 2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후시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그런데 그 관련 근거가 권고조항이다 보니까 최근 안전보건공단이나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서울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나, 지역인재 채용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시늉만 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혁신도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혁신도시의 건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출신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그것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헌법상의 평등권에 조금 위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저도 그 법안을 발의할 때, 개정할 때 국회입법조사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지요.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대 출신이 공공기관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인재들이 취업이 잘되는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지역인재 활용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 본 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을 할 때 보니까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재부가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역 출신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

출신 채용률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어떤 이전 지역 내지는 지역의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존경하는 이강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앞서 잠깐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러한 지역인재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채용할 때 좀 유리한 상황을 갖게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지금 부총리님의 말을 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지식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출신들이 서울로 대학 가는 이유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에 가지 않고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출신의 활용이 매우 필요합니다. 소관부처 장관님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지역 출신자들의 공공기관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고맙습니다.

○**이강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난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는 우리 국민들

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서 대내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 꿈의 목표인 국민소득 5만 불 달성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이강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옥 의원** 어려운 삶을 꾸려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순옥 의원입니다.

18세기 영국 근대 보수정치 이론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삶이 편안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정치를 원한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야 모두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행복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국무총리님께서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또 경제에 환원되어서 선순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순옥 의원** 예, 그러나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중 양극화, 세대갈등, 자살, 저출산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는 결국 민생문제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기반인 일자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순옥 의원** 그리고 국민들은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오정', '오륙도'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88만 원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 세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그것도 잘 느끼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대국민 사기로 판명난 747 처럼 그냥 목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국민들과의 약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고용률을 70%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꼭 달성해야 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먼저 창업을 좀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 그다음 중소기업을 좀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그런 생각, 그다음 이번의 규제 완화 문제도 서비스 산업 등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예, 그러면 그것 나중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현오석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전순옥 의원** 현재의 추세라면 사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고용률 70%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문제는 고용률 자체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이 너무 낮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좀 보면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30%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올 2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14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500만 개가 되던 청년일자리가 작년 2013년도를 기해서 387만 개로 123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

이 직장에서 창의적으로 기량을 펼치면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부총리께서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 자녀의 취업을 위해 정부에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존경하는 전순옥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달리 성장률 목표가 아닌 고용률을 목표로 내세운 게 그러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질문하신 대로 70%의 달성목표는 쉽지는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70% 목표를 각 과제마다 제가 직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그러면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늘·지·오' 이 중 하나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언론들이 진단한 평가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고 언론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시간제 근로자가 월평균 임금이 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한 30%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제 근로자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이것은 사실 부총리님 월급의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률 목표에만 정부가 무리하게 사실 집착하면서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한, 질 낮은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용이 그동안 2월 달 같은 경우는 83만 명 늘었지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

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어떤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또는 시간제 선택제의 경우도 차별이 없고 또 자발적이고 또 근로환경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자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순옥 의원 그러나 고용률 70%와 유사한 공약이 지난 새누리당, 정부의 일자리 300만 개 공약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만들어진 125만 개 일자리 중 그 절반인 62만 개가 시간제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임금 61만 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17% 정도밖에 안 되고 평균 근속년수는 3개월 이것이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만약에 경제부총리님의 자녀들이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부총리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래서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라고 하면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제 선택제하고 그냥 일반 일자리하고 바로 비교하는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현재 한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시간제 일자리를 일반적인 전일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하고 가깝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경우에, 또 특히 주부님들이 그런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완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순옥 의원 그러나 지난 실패한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말만 바꿨지요. 그래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니 또다시 말을 창조합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제 일자리를 얘기했습니다.

노벨경제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을 선택하면 단식이

다, 하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면 아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막 가져다 쓰는 정부나 경제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4시간과 6시간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4시간과 8시간의 선택은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바로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정부가 시간선택제 보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도 종전의 대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시간제에서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선택제 시간제 일자리에는 핵심인 선택이 빠져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시간제한제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선택이 되지만 좋은 것은 선택이 안 되는, 한마디로 나쁜 선택제 일자리인 것입니다.

4시간과 6시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시간제와 전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해야 선택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호법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욕아라든지 거기에서 임신이라든지 학업 같은 데로 확산시킬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시간제 선택의 그 이후에, 단축 기간 이후에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순옥 의원 예, 그러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예, 부총리님.

그러나 그러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래서 한쪽 방향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순옥 의원 그러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

당히 어렵다는 것이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입니다. 청년들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일자리를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조업과 공공 부문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유럽 제조업 공장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핸드백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 한국 여성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정말 서비스업만 강조하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제조업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본 의원은 섬유패션 산업이나 의류봉제, 가방, 수제화, 슈얼리, 안경과 같은 우리 전통 제조산업을 한류 문화, IT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는 지금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손기술 노하우를 가진 숙련 공에 기반하면서 도심에 집적화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정책, 현재 아무것도 정부에는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작은 것, 힘없는 다수를 우선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수가 일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고 또 지방마다 특성화된 사업을 펼쳐서 지방 특유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쪽의

노력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재공업화 전략, 제조업 부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범정부적 제조업 활성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의원** 그러면 연구하시면 연구하신 내용을 나중에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은.

제가 조그만 사례를 하나 들어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1000명이 1원씩 잃게 되고 오직 1명이 1000원을 얻게 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0명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직 1명이 1000원을 얻게 된다면 그 1명은 죽자고 힘을 다하고 잃어도 1원뿐인 1000명은 그저 소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능력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면 혼자 사활을 걸고 싸운 오직 1명은 정책을 바꾸고 마침내 1000원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직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고 부총리님께서서는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마는 지금의 취지는 아마 그러한 경제정책의 혜택이 국민 골고루 잘 가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전순옥 의원** 골고루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재벌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입니다.

대선 당시 국민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를 오직 한 사람이 강력히 저항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지난해 1월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법정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은 300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평균연봉의 1152배가

됩니다. 시간제 노동자 평균연봉의 3865배입니다. 최 회장의 시간당 보수는 1446만 원입니다. 1시간 49분만 일하면 노동자 평균연봉을 받고 단 32분만 일하면 시간제 노동자 1년치 급여를 가지고 갑니다.

3865배, 130번을 더 태어나 일해야 하는 현실이 정의롭고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그러한, 소위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중산층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재벌의 소원 수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연말 논란이 된 외출법 개정, 바로 SK와 GS가 제기한 민원입니다. 공공기관 부지 내 공장건립은 S-Oil, 초등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허가는 잘 알다시피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규제 완화는 바로 의료, 금융, 교육, 환경 등 공적 이익의 사유화,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세대 약탈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기본 업무는 공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한 사람 재벌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지난번에 네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활성화대책회의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바로 그것은 존경하는 전순옥 의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이야말로 모든 경제정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한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수혜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다뤘던 과제 중의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과제가 상당히 있다, 중소기업 전용 설비투자펀드라든지 또 산단 내 어떤 복합용지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것은 모두 중소기업의 대상, 그런 제도의 개선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순옥 의원 하지만 지난 정부 5년 동안 기업의 연평균 투자율은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그때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규제 완화가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고 더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전경련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고 고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이 부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미 발표한 것입니다만 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6만 5000명 수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른 부문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의 차별성을 우리가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순옥 의원 본 의원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에서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의 경우 작년에 23개 기관에서 7383명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승인한 것은 2300명 정도였습니다. 5000개의 일자리를 정부 스스로가 없애고 있습니다.

사실 기재부가 정원을 통제하면서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저지하고 있고 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전에,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정상화 이전에 기획재정부 정상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은 기관의 효율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고용률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공공기관들은 바로 요금 인상,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과도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로 국민의 부담에 귀착된다는 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정원 관리는 불가피하고 특히 많은 공공기관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만한 인력 관리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정원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순옥 의원 그동안에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공공기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일어난 문제는 기재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이번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순옥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전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明熙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축이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어 수출 위주인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국내에는 소비 심리와 산업 생산 등 국내 경기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이르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 역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여 경제 체질을 변모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입니다.

현재 농어업계는 AI와 해양 기름 유출로 수많

은 축산 농가와 어민 그리고 국민들이 심리적·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피해 농어가의 아픔을 조속히 들어서 하루빨리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농어민의 불안 요소인 한중 FTA와 TPP 과정에서 농수산물에 초민감품목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농어민을 대표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홍원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새민연 김영주 의원이 7시간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야기를 하며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와 풀어서는 안 될 규제가 있다고 말하며 풀어서 안 될 규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암덩어리라고 표현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 호텔 신축 건을 지목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를 막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고 하시면서 이게 암덩어리라고 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영등포 일을 거명하면서 한 일은 없습니다.

○尹明熙 議員 그러면 앞으로 부처에서는 좋은 규제인지 이런 나쁜 규제인지 더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꼭 필요한 규제가 있고 없어야 될 규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는 우리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카드처럼 정보에 관한 문제 또는 복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제다, 그러나 다만 투자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런 규제는 고쳐야 될 규제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고 정부도 그런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청와대 신문고가 문을 연 지 하루 만에 50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거 보도에서 봤습니다.

○尹明熙 議員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AI가 최초 발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전북 고창의 동림저수지 인근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尹明熙 議員 AI가 어떤 질병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류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소위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尹明熙 議員 지금까지 몇 번 발생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난 2003년에 처음 발생한 이후에 올해까지 다섯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尹明熙 議員 보상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직접 살처분 보상한 비용은 대략 한 2000억, 2064억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수매자금 12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이런 걸 치면 대략 한 3837억 정도 든 것으로 압니다.

○尹明熙 議員 2013년 9월 FAO에서는 AI 발생을 경고했고 발생 직전인 12월에도 환경부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AI가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환경부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부에서도 철새 이동시기를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철새를 포획을 하고 또 분변검사를 하고 상시예찰을 강화를 했습니다. 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AI가 발생하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AI 발생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차적으로는 중국에서 야생철새를 통해 가지고 AI 바이러스가 유입됐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장관님, 철새가 매년 찾아오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尹明熙 議員 AI 주원인이 철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야생조류에 대한 규

정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야생조류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마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여기에 의하면 감수성 있는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포획검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분변을 검사하도록 하고 또 반경 10km 이내는 가금농가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AI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철새와 관련된 방역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정비를 하고 또 SOP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철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이번에 만드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예.

특히 이번을 포함한 다섯 번의 AI 발생을 분석했을 때 지역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처럼 지역적 특색이 명확한데 중복 발생 지역이나, 5회 이상이 된 곳도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尹明熙 議員 2년에 한 번씩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렇게 꼭 2년에 한 번씩 오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네 차례 AI 발생 그때마다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서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36개소에 대해서 예찰 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실시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 AI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야생조류 종류별로 병원성이나 병원 기전 규명 등 이런 일련의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AI 양성으로 확인된 농가가 대략 187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를 포함해서 중복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AI 위험지구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예, 앞서 언급한 철새는 최초 유입원인일 뿐만 아니라 AI 전파의 매개체로서도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방역 과정

에서도 최대한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을 제한시켜야 했습니다.

장관님, 당시 항공방제, 공기부양정 방역, 폭음기 등으로 이동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 관계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확산시킨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항공방제 예를 들자면 그때가 AI가 처음 발생해서 굉장히 온 국민이 걱정할 때였는데 제가 그날, 1월 27일에 당진의 삼교호에 직접 나가서 항공방제 하는 것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칙은 철새도래지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져서 농경지 주변을 방제를 하자, 그리고 철새가 놀라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을 줬는데 이게 방제를 하고 돌아서는 가운데 아마 철새가 나는 것이 사진에 이렇게 찍히고 그래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예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기부양정 이야기도 처음 동림저수지에서 폐사체가 발견됐을 때 폐사체를 인양하기 위해서 한 번 사용했던 것이고요.

폭음기는 김제 지역에서 방제용으로 1회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전하자, 철새를 보호하자, 이런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또 조기에 AI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농가의 주장이 좀 상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尹明熙 議員 환경부의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주의요령에서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나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간 칸막이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견 저는 지당한 지적이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AI 방역 과정에서는 우리 부에 범정부 AI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부를 포함해서 관련 부처가 그야말로 윈스톱으로 위기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예를 들면 무슨 이견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철새를 방역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부하고 같이 방역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AI 사태가 진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방역실시요령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정부의 허술한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AI는 높은 치사율과 전파력을 지닌 1종 가축 전염병으로 소독제 역시 효력이 입증된 전용 소독제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지자체별 소독약 구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는 정부 공시된 소독약이 아닌 일반 소독약이나 구제역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T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독약과 관련해서는 소독약품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AI 방역기간에 지자체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630개 제품인데요. 그중에 616개, 97.7%는 효과가 검증된 그야말로 권장제품과 동일하거나 생석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일부 제품에서 권장제품은 아니지만 AI 소독 유효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한 9개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외국기관에서는 AI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품목이고, 5개 품목이 해충이나 약취 제거용이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AI 소독도 하면서 해충도 같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 같이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권장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도 개정을 하고, 지침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서 이런 뭐랄까, 좀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이번에 정부의 AI 대응 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발생 시 대응체계 일원화입니다. 현행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면 동물 전염병의 방역전문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임에도 발생 시 이 기관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서 조사나 자문기관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전염병 발생 시 질병 발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검역본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

전 예방부터 발생 시 대응 업무까지 신속한 대응을 수행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것처럼 범정부 원스톱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검역본부도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를 빨리하고, 정밀하게 진단하고, 역학분석하고, 연구·개발하고 또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검역본부는 1개 과에 16명만이 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정밀한 검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그 체계를 좀 개편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보건복지부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센터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尹明熙 議員 여기는 장관 직속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시에는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이 되더라도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에는 검역본부 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소독제를 지자체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역본부 안에 어떤 기구를 두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장관님, 10년간 AI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시다마는 대략 지난 네 차례의 발생에 한 3837억 정도 직접적으로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이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3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적정 사육밀도 등 가금류 사육환경이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의 가금류 사육환경입니다. 밀집사육은 전염병 전파가 빠를 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빛 또한 산란기 사육 현장에서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4시간 불을 켜 둔 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물복지형 케이지 설치, 케이지 자동소독시설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측면을 고려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육환경을 고려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동물복지형 케이지라든지 케이지 자동소독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제로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가금 사육 농장주, 농가의 방역 의식이랄까요, 전염병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도 강화해 가지고 농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차단방역을 할 수 있는 의사와 역량 이런 것을 길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복지형 가축 사육을 확대해서 건강한 농축산물이 곧 안전한 먹거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10년을 유예하여 2014년 9월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WTO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관세화 이후에

한중 FTA나 TPP 협상에서 관세 감축을 요구하면 고율 관세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WTO에서의 쌀 관세화 여부하고 FTA에서 쌀 시장개방 여부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홉 차례의 FTA를 체결해 왔습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앞으로도 체결될 FTA라든가 이런 데서 쌀은 양허 제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尹明熙 議員** 3월 31일 통상특위 때 장관님께서 TPP에서 쌀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가 정부 입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만일 TPP 참여 또는 가입 결정 이후에도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라든가 한·EU FTA를 포함해서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에 대한 양허 제외를 관철해 왔고 앞으로 향후에 TPP에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쌀이 TPP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TPP에 참여할 때 쌀이 양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입장하고, 쌀 관련 논의는 TPP 차원이 아니라 WTO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양자협의 과정에서도 쌀에 대한 이런 입장은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차관님, 관세화하더라도 관세율을 300%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외국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쌀 관세화 시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상의 공식에 따라서 우리 측이 산정하지만 관세화 시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면서도 가능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산정해서 수입쌀로부터 국내 쌀 산업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어떤 특정 세율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관세화하더라도 최근의 국내외 쌀 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외국 쌀이 추가로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尹明熙 議員** 한국 정부는 검토 결과를 알리고 한중 FTA나 TPP 협상에서 쌀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 신뢰와 믿음을 농업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현오석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위한 포석으로 노무현 정부가 10년간 119조 원을 농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119조 안에는 10년 치 농림투자 예산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尹明熙 議員**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 농업계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고 마치 119조가 FTA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양 포장된 부분은 한중 FTA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칠레 협정 당시 피해가 큰 농어업인의 지원 대책 마련으로 관련법과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FTA 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자체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총리님, 무늬만…… 지원 기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기금의 운영 및 재정 구조가 왜 이렇게 취약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FTA 이행기금에 여러 가지 재원의 소스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정부 외 일반 인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적립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FTA 기금의 지출 사업이 확정되면 자체적인 그러한 수입을 제외한 전액을 농특에서 지원해서 지출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기금의 재원 중에는 정부 외 인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도 있습니다. 현재 적립금이 전무한데 이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위 FTA 발효 이후 기간이 그렇게 크게 지나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이익을 누리는 그런 산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출연금이라든지 기부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尹明熙 議員 부총리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서비스·제조업의 약진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FTA 수혜 산업에서 이익의 일부를 부담하여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해 주자는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FTA 체결의 이익을 공유하자' 하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할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우선 FTA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수혜자 중에 상당 부분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한일 FTA 같으면 농업 부분도 수혜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혜자의 구분 확정이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 측면으로 보면 이미 수혜의 이익을 토대로 해서 세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 이익과 비용하고의 연계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尹明熙 議員 그러면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FTA 관련된 기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농특이라든지 기타를 비롯해서 정부가 그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 FTA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앞서 FTA 기금에 있어서 민간 기부금이 전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인즉

민간 기업이 기부를 하는 목적은 기업체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가 큰데 이 기금의 경우는 그 실효성이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두 가지 측면, 지금 존경하는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기부금으로 해서 기부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계가 보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FTA 기금에 기부하는 민간 기업의 경우 수출입과 관련한 정부용자나 보조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 부분에 자발적인 참여로 궁극적으로는 무역 이득이 농어업 분야와 공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원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캐나다 FTA까지 12건의 FTA를 발효 및 타결하면서 총 다섯 번의 대책과 계획을 변경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책들이 중복되고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FTA에 따른 농업대책을 건의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행과제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른 예산 수립은 기획재정부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총리님, 통상조약대책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국 단위의 농민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도 잇따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尹明熙 議員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에도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尹明熙 議員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대책위를 총리 직속 또는 국가 재정과 조정을 관장하는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주무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면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하되 중요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또 그 밖에도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또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尹明熙 議員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보증기구가 자회사로 설립되는 것과 운용자금이 5500억 정도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5500억 정도면 한 5년 동안에 10조 정도 지원효과가 있는 거라서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尹明熙 議員 많이 부족하면 더 검토하시겠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산 사정을 봐서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향후 설립에 관한 일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일단 예산 확보 전이라도 저희가 금년 안에 일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해서 연내에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해운산업이 경기변동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담보대출비율(LTV)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지금 해외 사례하고 보증여력 또 보증재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TV의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해운보증기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도입한 톤세제 역시 올해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님, 해운 선진국들도 톤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현재 한 20여 개국의 유럽 및 아시아에서 톤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톤세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톤세제가 기존의 법인세하고 달리 표준수익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절감분만큼 선박 확보에 투자가 돼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일몰을 연장할 게 아니라 영구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일몰 문제는 모든 세제에 있어서, 세제감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지만 그 일몰에 따른 어떤 세수 내지는 조세형평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톤세제의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도 도입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각 부처에서 이런 조세지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예,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으로 요즘 해운과 부산항의 최대 화두인 P3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해운업계에서 P3 네트워크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지난 3월 3일에 우리나라 선주협회에서 세계 1·2·3위 해운선사가 결합한 P3의 결합에 대한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 의견서로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P3 승인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와 긴밀한 논의는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P3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는 해운법에서는 저희 해양수산부가 이것이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또 공정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해운법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그

협약의 시행 중지라든지 내용의 변경 또 조정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양수산부가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그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尹明熙 議員 만일 우리 정부의 승인이 불가피하다면 승인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해운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할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양수산부가 판단한 사항을 의견으로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현재 P3에서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국은 닝보항 등을 환적거점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단기적으로는 부산항 등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적인센티브 확대라든지 또 비효율적인 운송구조 개선을 통해서 환적비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 개선이라든지, 배후단지의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중국보다 국제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도록 강화해 나가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 해양수산부 또 부산항만공사 중심으로 해서 이 항만 관계사들이 모여서 부산항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선적 경쟁력 확보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明熙 議員 해운업계와 부산항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해수부의 적조예보시스템은 적조가 발생된 후에야 가동되었고 적조 구제물질로는 황토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장관님, 적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적조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서 높은 수온 또 일사량, 영양염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7월에 적조가 발생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 적조예보 시스템은 올해부터 작동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전에는 적조 예보체계가 두 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주의보·경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단계 더 신설했습니다. 관심단계로 해서 세분하고 또 발령기준도 현실에 맞게 좀 개선했고 그것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미래부와 협의 중인 구제물질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구제물질 개발 연구는 작년 10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외 관련 기술 동향을 파악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가 도출된 단계는 아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尹明熙 議員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동안 해양 분야에 비해 수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 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어민들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장관이 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明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감사합니다.

○尹明熙 議員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앙리 마티스는 '내가 꿈꾸는 것은 균형의 예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경제 흐름에 맞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은 뭔가를 위해 하나는 버려야 하는데 그 하나가 우리 농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은 그동안 AI 발생과 FTA 등 수입 개방의 물결 속에 힘겨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타 분야와 농어업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

최근 들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의미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농업이 천하의 근본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 가는 농민의 삶에 봄꽃 같은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윤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새누리당 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는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립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화면도 부탁드립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 특징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매매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세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고가 아파트는 전셋값이 상승하고 저가의 서민주택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자산이 노후를 감당해 준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젊은 세대의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하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 이러한 우리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러기 때문에 정부도 작년도에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우선 매매시장, 저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피해 왔고 금년 들어서는 이러한 임대차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예, 맞습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주택정책의 방향은 첫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둘째 전세·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지원 대책 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돈 벌어서, 그리고 또 돈을 빌려서 보태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대세인 시절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택정책의 중심이 전세·월세 안정 지원정책으로 옮겨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일단 매매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매매의 여유가 없는 분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든지 공급 측의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정책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주거 형태는, 특히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할 서민들의 주거 형태는 전월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경우 2010년 통계를 보면 전세·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53%이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66%가 전월세에 살고 계십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서민들은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내면서 살고 계십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바람은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둘째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졸업이라도 내 집에서 시키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지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전세보증금과 월세 연간 인상률을 법으로 제한하는 전세·월세 상한제입니다. 또 거주기간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재계약 시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도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정부만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전월세시장이 급격히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두 제도를 꼭 도입해서 전월세 사시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생활의 안정을 피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도 가장 우선적인 정부의 어젠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지금 많이 논의되는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것은 오히려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생활의 안정에 오히려 더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입니다.

○윤후덕 의원 정부는 늘 그렇게 부작용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사이에 82주간 수도권 전셋값이 오른 것이 몇 %인지 아십니까? 57.4%입니다. 2년 치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20%가 올랐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월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전세 살아 보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월세 살아 보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월세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니다.

○윤후덕 의원 자,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월세 살 내 집 구하기도, 내 집 찾아내기도 어려워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데에 정부 정책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우처제도지요. 임대료 보조제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첫 번째, 이 임대료 보조제도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바우처법에 근거를 뒀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제정법률안을 낸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데 기왕에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자 73만 가구에 더해 불과 12만 가구만 순증되었을 뿐이고 또 지원 금액도 한 3만 원 정도밖에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도가 시작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상과 금액을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미 존경하는 윤후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선 월세를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세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또 세금을 면제받는 그러한 열악한 주거자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거급여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정의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또 지원 금액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킴(scheme) 말고 또 행복주택이라든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아가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물론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지요. 여하튼 임대료 보조제도의 대상과 금액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정책을 할 때 정책의 효과로 보아가면서 또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효과성 같은 것을 보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대상자들은 절박합니다.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월세 사시는 분들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전체적으로 한, 가구 수로 보면 월세가 지금 한 383만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 통계가 언제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게 12년 말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또 마찬가지로 386만 가구 해서 전체적으로 한 4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지금쯤, 2014년 4월쯤에는 월세 사시는 분들이 한 400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2010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

○**윤후덕 의원** 1만 5000명이었습니다. 전체 월세가구 400만 명 중에 0.4%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그 구체적인 대상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질의서 어젯밤에 보내 드렸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자, 400만 월세가구 중에 소득공제를 신청한 대상자는 0.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홍보만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발표해 놓고, 특히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액의 월세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 월세를 보조해 주겠다고, 소득공제 해 주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어려운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 조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바로 아까 그

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자, 정책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요? 금년 2월 21일 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안행부에서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3월 31일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 과세자료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과세자료, 지금 그것을 통보하더라도 현재는 그것의 활용은 3주택 이상만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과세자료를 받았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윤후덕 의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데이터를 안행부가 그동안 정리하고 축적시켜 왔습니다. 금년 3월 31일 날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건이 몇 만 건이고 전세·월세 분류되고 과세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13년 연말정산자료에 따르면 월세소득공제 신청현황을 보니까 신청자는 9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한 1600만 중에 33%가 지금 면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통보받은 건수가 얼마나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자, 부총리, 3월 5일 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 전에 월세소득공제에 대한 과

세 건, 1만 5000건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고 과세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윤후덕 의원 소득공제를 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윤후덕 의원 그런데 이번에 과세유예를 2년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세유예를 하면 공제도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아니요. 총리가 엄청난 정책실패를 자초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공제는 해 주면서 과세는 안 하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전세·월세 계약 건의 내용이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시중에서는 임대소득 과세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국세청이 언제라도 해당 주택의 구입자금에 대한 소명, 즉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그런 불안심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조금 회복되던 주택시장이 급랭 국면으로 일거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3월 경제장관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 간주임대료라고 하지요. 그것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동안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적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3주택부터 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적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월세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겁니다.

○윤후덕 의원 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2주택자에 대한 전세임대소득을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 3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어느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느 특정 장관보다는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다음 날 임대차선진화방안에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월세임대소득을 과세하겠다고, 분리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5일, 열흘 만이지요. 이 과세 방침을 2년간 과세 유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지적했듯이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는 그런 정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총리께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 한 것, 못 한 것’을 했다고 질책을 하신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약간 그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기재부에서 다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니다.

○윤후덕 의원 3월 6일 질책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책 맞지요? 시인하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각 부처가 다 유의를 하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니다.

○윤후덕 의원 총리, 정부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부양정책에 나섰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이렇게 해서 겨우 1, 2월에 주택 매매시장이 거래가 증가하고 소폭의 가격 반등 조짐이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임대소득 과세 확대정책 발표와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로 인해서 애써서 살리려던 부동산시장이 일거에 냉각되어 버렸습니다. 시인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자, 이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장관을 질책하셔야 됩니다.

헌법 38조3항이 뭐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좋은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를 자초한 경제부총리를 해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이번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시장 겨우 살리려다가 또다시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윤후덕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엣그제 부동산중개인 하시는 분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대소득 과세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이분들의 불안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살펴보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2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좀 안정도 되고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원장 나오십시오.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에 대한 연봉을 공개했습

니다.

저는 한국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개선이라고 상당히 이 법을 개정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주 너무 어마어마해요.

등기임원의 연봉은 대기업직원 연봉의 76배이고 공기업, 철도공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96배에 해당하고 수많은 비정규직 평균 연봉에 비하면 368배이고 젊은이들 알바하지요, 알바 연봉 소득의 무려 62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아직도 쓸어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일단 제도개선을 해서 그동안 보수총액을 공개하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도의 추이를 좀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국민들은 비등기임원은 왜 공개를 안 했느냐, 또 그 외에 더 많은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해라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지금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또 비등기임원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핵심 기술 인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또 그것이 공개됐을 때 영업기밀 같은 것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의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모든 비등기임원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윤후덕 의원**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도 명시돼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행령에 입법 미비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금융위원장 신제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어제 그것 보고요. 저희가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방법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금융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돼 있기는 하지만 더 필요하다면 좀 고쳐서 여러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공개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윤후덕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삼척 출신의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재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 이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를 넘어선 세계가 주목했던 고속성장 이면에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양극화 현상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상실, 사회안전망 부실 등으로 인해 최근 세 모녀가 삶을 포기하고 장애아를 키우던 40대 가장도 자녀와 함께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힘만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국가, 선진 사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공익 우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정부가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자력복지 모델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영역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분야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태동하여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과열 경쟁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

점 때문에 사회적경제 전체가 부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와 방향성 상실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해 도입된 사회적경제 자체의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관련 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사회적경제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정책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본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총리, 이것은 한 일간신문의 마을기업이 중요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영국에서는 9000여 개에 이르는 마을기업, 즉 공동체이익회사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소개된 공동체이익회사를 사회적기업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을기업 관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별도의 유형으로 보고 있어서 별도의 법안과 지원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체나 지원 방식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을 지정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이재 의원** 정부가 같은 정책을 두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안,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부 행태야말로 부처별 기득권 지키기, 부처별 출혈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의원**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종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민간 주도로 양성할 목적으로 제도화한 협동조합 모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서비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협동조합 주무부처가 아닌 탓으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사회적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두 부처 간에 신청 건수 대비 인가 비율이 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부처 간 견고한 칸막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 국민적 불편이, 불이익이 점점 확대되는 현실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 취약계층 어떤 사람이 자활센터에서 직업 재활교육을 받고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창업해서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경유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현행 제도에 따라서는 이 기업은 자활기업이자 협동조합이고 또 마을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4개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일곱 시간이 넘도록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했습니다.

규제란 뭘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규제가 아니고 정부부처 간 협업과 정책 통합이 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자발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마저도 저해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규제가 아니고 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이재 의원**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박근혜정부가 대표 공약으로 내는 고용률 70% 달성에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 칸막이, 중복 출혈 경쟁, 이런 비효율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영역에까지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재정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은 ‘서로 좋은 가게’라는 이름으로 또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스토어 36.5’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독립적 판매장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전문가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해 달라고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의원** 왜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의원** 부처 간에 칸막이가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합니다. 바로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민간부문에서 특히 지자체는 스스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업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사회적경제과’로 일원화하고 통합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시, 강원도, 충남, 전북도 마찬가지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경기도에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의원**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 하니까 지방정부가 이런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중복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들, 중간 지원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원화와 통합을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협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이재 의원** 총리께서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경제부총리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OECD 주요 국가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기존 부처 외에도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뜻한 R&D사업,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예산부처의 수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앞서 이이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 분절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예산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의원** 문제는 이렇듯 정부정책의 잘못된 집행체제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의 장점인 자조와 협동정신이 오히려 훼손되고 각 부처 지원사업을 따 내기 위한 줄서기 경쟁으로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정부 보조금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은 개별 소관부처를 통한 지원금, 보조금보다는 금융지원이나 판로,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합생태계 구축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정부의 어떤 재정지원보다는 자생력을 바탕

으로 해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이이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기타 어떤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지원을 해서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간접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금융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활기금의 경우 336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것은 167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는 운영상황도 142억 원이 조성되었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19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기업 금융정책 지원액도 450억 원 중에 실제 집행된 돈은 10%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미소금융조차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앞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비스에도 어떤 일관된 그러한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단순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이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시스템, 여기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요 선진국들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금융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개인의 창업은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개개인의 창업대출은 부실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미소금융 운영방식을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과 각종 금융을 하나로 모

오고 미소금융 또 신용보증기금까지 연계해서 영국 정부가 설립한 빅 소사이어티 캐피털(Big Society Capital)처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정부도 지금이 의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연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현재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기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기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의원** 사회적경제는 빈곤을 해소하는 똑똑한 복지 또 따뜻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착한 경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사회적경제 분야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당면한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자 사회적경제특위를 발족했습니다. 사회적경제특위에서는 그동안 숱한 논의를 거쳐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첫째 사회적경제의 총괄조정기구와 실무추진기관을 명시하고,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또 넷째 사회적 가치평가체계 정립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의 총괄조정기구를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모두에 이이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정책들의 유사·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하고 또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이재 의원** 부총리님, 정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고맙습니다.

○**이이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적경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이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공동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보수와 진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립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한국적 성공모델을 위해 여와 야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혁신을 이루어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야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지난 4월 4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가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구례군의 자연드림파크 방문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금요일,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 윤명희 의원님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구례 자연드림파크 조성 현황을 보면, 약 4만 5000평 규모의 라면·우리밀·막걸리·맥주·육가공·오리고기·김치·제분·도정·전분 이런 18개의 각종 공장들이 가동 중이고, 농산물유통센터, 물류종합관리센터, 종업원 기숙사 이런 건 물론이고,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영화관 등 여러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620억 원이 투자되어서 400여 명의 고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 모델이 고용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협동조합 성공 모델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우리 경제에 희망의 물결이 넘쳐 나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다섯 가지 특징과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홀로 정치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갈등 조장 정치입니다. 한쪽 편만 들어 국론을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녀사냥 정치입니다. 모든 잘못의 책임을 한 쪽에게만 따지고 있습니다.

줄 세우기 정치입니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는 공수표가 되었고, 모든 관료와 여당 정치인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정치입니다. 정상적인 정책결정은 사라지고, 국민보다는 대통령을 띄우기 위한 이벤트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통치방식은 전형적으로 인기영합적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지시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직원, 노동조합,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화를 했느냐고요?

○김제남 의원 대화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서도 하고, 기회에 따라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제가 소관 기관, 공기업에게 모두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화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어르신들께 첫 약속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 없다고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파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르신들께 드린 첫 약속, 어떻게 이행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전부에게 다 드렸으면 하지만 현재의 재정상태와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일시적 조정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더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한꺼번에 다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사정이 생기면 공개적으로 토론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저는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나 행복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대통령께서는 국회도 배제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회를 압당어리 규제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입법권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발언에 제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는 권위주의시대, 독재시대 정치경험을 떨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청와대 아래 두시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나홀로 국정 운영, 저는 당장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전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개혁 문제는 국회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국회를 도외시하고 무시하겠습니까?

○김제남 의원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얼마 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학교 옆 관광호텔로 쟁점이 된 당산초등학교 주변 사진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제남 의원 총리님, 관광호텔 예정부지 옆에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번에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관광호텔 개발업자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나 주민들은 참여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다수 시민의 생활권, 주거권, 학습권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광호텔 개발권자에게 사업권을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절대정화구역은 그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대정화구역도, 뭘니까? 술집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제남 의원 또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끝장토론 중에 나온 52건 중 41건을 즉시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 중 14건 이상은 이해관계가 맞서는 것

입니다.

중견기업 성장 애로 완화 문제는 중소기업하고 갈등관계가 있고,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소비자들과 갈등관계가 있고, 원격의료 허용은 동네병원,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끝장토론 52건 중 반대 측 당사자가 1명이라도 토론에 참석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가 되었습니다. 꼭 찬성 쪽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못 봤습니다. 갈등이 조장되는 이유입니다.

국무조정실이 갈등 관리 주무 부처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예, 아주 중요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심판 없이 한쪽 편을 들며 경기를 하면 공정 시비가 일어납니다.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규제는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녕과 공공성을 지키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입니다. 대통령께서 규제와의 전쟁 통치로 갈등 증폭이 우려되는데, 책임총리는 어떻게 갈등을 절약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각계 의견 듣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갈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님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정책 실패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12개 공공기관 중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석유공사는 부실 해외개발 사업,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LH는 무분별한 택지개발 사업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부채 증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현재 분석 중입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요인도 있고 또 지나친 투자, 방만한 경영,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 특히 낙하산 인사의 부실 운영 때문이다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두고 몇몇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후생비 사례만을 들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 탄압하고 그리고 공기업 노동자를 죽이는, 저는 이거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공공기관 자체가 지금 '신의 직장'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공공기관도 CEO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같이 그런 인식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개선 노력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보니까 18개 부채 감축 중점관리기관 부채를 4년 동안 42조 원 줄인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1048억 원 줄인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채 감축 대비 복리후생비 감축은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 문제를 왜 이렇게 전면에 부각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지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오히려 낙하산인사 전면 개혁을 우선하겠다 이거를 발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한 집안도 집안이 어려우면 그것이 설령, 전체적으로 봐서 다 절약을 하고 그런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만 경영 내지는 복리후생비가 적다 하더라도 기관이 부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면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만 경영은 근절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스피리트(spirit)하에서 부채 관리,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부총리님, 저랑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 어록입니다. '진돗개가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해요. 우리는 진돗개정신으로 한다', 공기업 정상화 말씀이신데 저는 마녀사냥식 같습니다. 공기업 노조, 노동자는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의 동반자입니다.

공기업 변화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기업 노조,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기업 민주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공기업 정상화에 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지 어떠한 특정의 대상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3월 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총리실 새로운 규제 완화 지침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각 부처에 내려갈 지침도 없는데 각 부처들이 10% 줄인다, 25% 줄인다, 규제 완화 목표를 완전 충족 맹세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가 줄속행정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총리실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에서 할 일, 경제부처 단위에서 할 일 그리고 총리실 단위에서 할 일 이렇게 분류를 했고, 과제별로 목표와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실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규제정비계획 수립 지침 만들었었고, 201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입안 중이었습니다. 원래 이거는 2월 말까지 법이 정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공표하는 그런 추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이 위법을 조장하고 계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규제 문제가 작년에 손톱 밑 가시에서 출발을 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등 절차를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 나름의 계획을 세웠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갈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 TV 끝장토론에 나와 푸드트럭 완화해 달라고 했던 분께서 정부가 즉시 조치하니까 규제 풀어줘 고마운데 너무 위험한 속도 아

닌가, “첫발을 잘 디더야 돼요. 시장에서 외면당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순리대로 했으면 합니다.”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국민이 규제 완화의 위험한 속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FTA 시대에 잘못된 규제 완화는 되돌릴 수 없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FTA 연계 점검하지 않고 줄속 규제 완화, 과속을 내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바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취약한 분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책임총리제 그리고 국무위원의 인사제청권, 정책조정 등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실질 권한 보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총리님은 본인이 지금 책임총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께서 하실 일, 주무장관들이 하실 일,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 중요 정책 목표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고 각 장관이 책임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님, 지난번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래 주무부처가 발표할 예정이었고 사전 브리핑까지 했어요. 갑자기 대통령 담화로 형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중요도를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될 만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또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예정되었다가 TV 끝장토론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형식이나 이런 것은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님, 끝장토론 이벤트로 나온

내용 중에 이미 확정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제남 의원 자, 잘 듣고 한번 이따 말씀해주십시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이미 국토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액티브엑스, 미래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해 추진 중입니다. 규제개혁 공무원 훈·포장,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1650건 규제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미 할 것 다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재탕 이벤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더 나가시면 강압하고 공포 이벤트가 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현장 건의 상당수는 규제 완화와는 상관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을 확대해 달라’, ‘아예 규제가 없으니 기준을 만들어 달라’ 심지어는 상속세 완화, 세무조사 축소,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벤트 성과 홍보를 위해서 모두 규제 완화로 포장되어서 ‘즉시 조치’로 결정됐습니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게 규제 완화의 현실입니다.

총리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민원이나 건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검토가 되어서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고,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뭐 모든 것이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자,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봅니다. 규제 완화는 민생이 아닌 대기업 민원 해소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52개 현장 민원 중에서 핵심 알맹이 열네 가지는 사실상 대기업 이익을 위한 민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 보십시오.

정부가 강행하는 규제 완화,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소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

생각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작년에 도, 제가 지금 질문을 미리 못 받아서 수치를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10건 정도가 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필요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실종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김제남 의원 열네 가지 제가 화면에 띄워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중소기업 민생현장 전국 순회를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는 대기업의 탐욕은 갖가지 편법, 위법적인 형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매는 물론 도매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종을 지정 보호해 달라고 하는 우리 소상공인의 절절한 요구를 경청하고 돌아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계획에서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넓히겠다 약속했지만 신규 지정은 지금 단 1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요구하자 다행히 동반성장위원회가 향후 적합업종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국정계획인 적합업종 지정계획 넓힐 약속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상인들께 약속 한번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질문을 못 받아서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김제남 의원 지난 3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영세 상공인을 퇴출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총리님, 600만 영세 상인, 자영업자 퇴출 대상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남 의원 정부 내에서 영세 상인 퇴출 운운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 박는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소상공인을 퇴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언어도단이고요.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본 의원은 ‘메가마트 사태 방지법’이라고 부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4월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메가마트’라는 업체가 3000만 원 과태료보다 영업이익이 크다고 공공연히 의무휴업일을 어겼습니다.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바로 ‘메가마트 사태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의원실을 방문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장관님, 메가마트 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처벌의 어떤 그런 수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인가 탈핵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방사능 방호 방재법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 방호 그리고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IAEA의 권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핵안보는 외교 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낡은 원전부터 질서 있게 감축함으로써 국민을 핵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에너지 농사’, ‘에너지 농부’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제남 의원** 시민들이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협동조합 만들고 태양과 바람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게 ‘에너지 농사’입니다.

정부는 대안이 없다면서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 시민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지런히 에너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에너지 농부와 같이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대안을 찾아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부지런히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국가’를 짓기 위해 민생과 손잡고 벽돌 하나씩 쌓아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 관료들은 ‘숨은 규제를 찾습니다’라고 전 시행정, 탁상행정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 시간과 행정력을 골목까지 온기가 느껴지도록 민생 현장을 살피는 데 주력하시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규제 완화는 국무총리에게 맡기시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 정치’가 되도록 통합정치 펼치십시오. 민생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김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부산진을 출신의 새누리당 이현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를 출신 새누리당 이현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의 장벽에 가로막힌 우리 철도를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중 열차페리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럽, 몽골, 러시아, 중국의 경우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이 되어 생산과 투자, 금융과 물류, 정보와 기술이 철도를 통해 모였다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물류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리 철도가 대륙과 효율적으로 연계된다면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시종착지로서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가 되어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 국제회의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하셨는데 그 핵심은 한국과 유라시아를 잇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북한 개방 유도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유라시아와의 네트워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런 물류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우선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역내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얻고 또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북한에 대해서 개방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議員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기본 실현 방안은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과의 네트워크 구축인데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북한 정세에 따라서 장시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대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북한과의 관계에 의존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처지인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선 나진-하산 간의 연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앞으로 진전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리라 생각합니다.

○李憲昇 議員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개방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이 어렵다면 중국 내륙 물류망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변화에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이 바로 한중 열차페리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현재 유럽과 중국에서는 열차페리가 상용화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말을 들었습니다.

○李憲昇 議員 열차페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해운을 통해서 열차와 해운을 복합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議員 그렇습니다.

열차페리는 300해리 이내의 단거리 해상과 800 km 이상의 내륙 철도를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송 시스템으로서 열차와 선박 간의 하역 과정을 생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철도를 이용할 때보다도 열차페리를 통할 경우에 대륙 철도망을 수평으로 연결해서 유라시아를 직선거리로 아우르는 경제적인 물류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차페리를 이용할 경우에 한국의 평택과 중국의 연태·정주 구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1TEU당 하역비용은 120달러, 육상 운송비용은 152달러가 절감이 되고, 수송시간도 74시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철도 기술연구원을 통해서 한중 열차페리 도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 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전용 부두라든지 인입철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보류하고 추후 사업 시행이 가능한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최근 국내 민간연구단체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해서 한중 열차페리 도입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도 중국 중서부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본 의원은 지난 겨울 중국 연태의 열차페리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에서는 한중 열차페리의 중요성을 알고 지난 1월부터 한중 열차페리 준비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직접 TF를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현재 평택항과 평택역을 철도로 잇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곳을 거점으로 열차페리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시설이 완공되는 2018년 이전에라도—이미 인천항에는 철도가 연결돼 있습니다—인천항에서 소규모 열차페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인천항은 전용 부두와 배후 물류단지 확보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사정으로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본 의원은 시범사업 실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관계부처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아시아 발전의 거대한 축이 이동되는 그 시기에 북한의 정세 변화에도 위협받지 않는 뉴실크로드를 확보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차페리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 부산 도심철도시설 재배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부산 한 가운데에 위치한 부산 진구 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이곳은 금융·교통·상업·문화가 발달한 지역인데 거대한 철도시설이 자리잡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메랑같이 보이는 과란색의 넓은 부분이 고속철도 차량정비단, 일반철도 차량정비단입니다. 두 시설의 면적이 31만 평으로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시설 양쪽으로는 경부선 본선, 가야선, 부전선, 동해남부선 등 4개의 철도노선이 교차해서 정말 복잡한 철도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사진 속의 기차길 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와 철길, 차량기지 사이에 고립돼서 주변 고층빌딩숲과 동떨어져서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설된 지 100년이 지난 철도시설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심 확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단절시켜 주민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소음과 분진 공해를 발생시켜 주변지역이 슬럼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여러 도시가 도시에 철도가 통과함으로써 겪고 있는 사정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議員** 그런데 2004년도 KTX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도심지 내 철도시설이 오히려 확대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철도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캠페인에서 부산시민 10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도심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총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오랫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議員** 지난 2009년과 12년 국토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철도차량정비기지는 부산 신항역 배후철도단지로 이전을 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방안으로 도출됐습니다. 또한 일반 철도 차량정비기지 앞을 지나가는 기존 경부선 일부 구간의 기능을 폐쇄시키고 가야선으로 우회한다면 경제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철도시설 이전이 가능한 방법이 제시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와 부산시에서 재배치 문제를 여러 차례 검토했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렇다면 부산 도심철도시설 기능 재배치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부산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중 비용 부담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연구를 안 해 봐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에서 그런 문제도 검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議員** 원인자가 지자체입니까? 저는 원인자는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철도는 국가기반 시설로 건설된 공공재로서 정부가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정비하고 재배치를 해서 철도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공해 문제를 최소화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최근 서울의 경우에는 용산 철도차량정비기지는 철도공사가 시행주체로 나서 가지고 2011년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3000억 원의 이전비용도 철도공사가 부담을 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이전비용의 75%를 정부가 부담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가지고 정부 주도하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 이전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국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철도시설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한정된 국가 예산 문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 원인자부담원칙,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부산의 낙후된 철도시설 이전에 대해 왜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의 철도시설이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전을 했다면 마땅히 부산 도심철도시설도 도시의 외곽으로 이전해서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제2의 수도권 부산도 철도시설을 이전해서 부도심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민의 주거환경 복지증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국비 지원은 정부 의지의 문제입니다. 부산의 도시 기회회복과 발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니다.

총리님, 다른 사진 한 번 더 봐 주시지요.

사진에 보이는 빨간색 지점은 부산 고속철도차량기지 내 DRMO 부지입니다. 주한미군이 재활용폐품처리장소로 사용했던 곳인데 철도공단이 되돌려 받아야 하는 철도시설 내 공여지입니다.

2003년도 부산 고속철도차량기지 설계 당시의 시행주체였던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이 부지 일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및 생활체육시설로 반영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기관이 한 약속은 정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부지는 SOFA 협정에 따라서 미군에 공여되어 관리되고 있고, 토양오염정화 등의 문제로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반환이 되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부지소유권은 국토부, 재산관리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용은 주한미군이 했습니다. 당연히 국방부로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오염된 토양이 치유되지 않는 한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입니다.

여기애다가 국방부도 SOFA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미 양측의 반환 합의가 있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도 한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총리께서는 이처럼 여러 부처에 난마처럼 걸쳐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부처 간 입장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憲昇 議員** 다음은 해양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총리님, 국가 GDP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해양산업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GDP 기여도 11년 기준으로 6.3%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해양력은 세계 12위 수준이고, 조선·해운 등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외 분야는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가 2020년까지 14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고급 해양 전문인력 양성에 소홀히 한 탓에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해사학과 입학정원이 1970년대 중반 이후 750명 수준에서 늘지 않고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상선대 규모는 330만t 규모였지만 지금은 3500만t으로 10배 이상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인력 양성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 양성은 커녕 국적상선대에 승선할 전문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인데, 이미 내년도에 약 5700명의 고급 선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외국으로부터 다수의 인력을 수입함에 따라서 해양 전문인력이 창출하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해양산업 기술발전의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를 지역구로 가진 여야 중진 두 분 의원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와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양 해양대학교 올해와 내년도 입학정원을 소폭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부족한 인력이 고임금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해양 전문인력 양성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해양 전문인력 양성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말씀대로 국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관련 학과 정원을 2017년까지 500명 증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議員**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양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서 해양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 증대와

예산 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런던에서 출발한 열차가 베를린을 거쳐 시베리아 몽골·중국을 관통하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2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을 통해 러시아와 미국의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도망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육지로부터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철의 실크로드에 편입해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방안으로서 한중 열차페리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할 부산 도심 철도시설의 재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우뚝 서고 철도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를 확보해서 새롭게 도시를 재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철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충남 천안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출신 박완주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아이 굶기지 않고 내 부모 공양할 수 있으며 삼시 세끼 먹을 걱정 안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서민의 마음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는 경제민주화가 사라졌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 어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민주화 공약, 총리님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10건을 입법 조치 완료했고, 금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 이 관련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러면 한번 다시 PT 자료 보시면, 제가 경제민주화 공약 17건을 분석해 봤더니 12건이 후퇴되거나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 경제민주화 정책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시지요.

보시다시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하겠다, 골목상권 보호하겠다’ 등등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혹여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 포기한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작년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외투법 개정했는데,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박완주 의원 한번 PT 자료 보시면요, 경제살리는 법이라고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셨습니다.

자료 보시면,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유치하려고 했던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에 대해 최근 중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최근에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반대 시위가 있었다는 것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렇습니다. 15명이 사망했구요.

그래서 지난해 환경 문제, 유해물질, 공정거래법을 우회한 입법, 이런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이렇게 우려됐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충분히 정부에서 검토하시고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알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총리님,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창조경제, 민생경제,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루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2년차에 들어서자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140개 국정과제 중 137번째 항목에 처박혀 있던 규제 합리화가 최고의 국정과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쓸데없는 규제’가 어떤 규제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지금 현재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막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없애자는 뜻에서 ‘암덩어리’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를 다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필요한 데 대해서는 유지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박완주 의원 그렇습니다. 규제는 힘의 남용을 막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이라고 합니다. 나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좋은 규제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경제민주화 규제까지 풀려지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같은 좋은 규제도 있는데 혹시 이것도 나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규제는 살릴 규제입니다. 좋은 규제입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지난 3월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에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 옆 호텔을 막는 규제는 나쁜 규제입니까, 쓸데없는 규제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학교의 환경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학교 환경을 저해하는 게 아닌 한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완주 의원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총리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제기한 호텔 건립 불허 소송에서 호텔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학생과 학교 교육이 가진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호텔 영업자의 이익이 학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환경은 매우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락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요, 더 법조인이시니까요, 사법부 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힐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대법원 판결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완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에는 규제개혁의 방향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실종됐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 160여 명이 참여한 그날 민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일반 시민이나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초대됐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각계의 사람들이 많이 초대되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런데 실제 TV 생중계에서는 학교 옆 관광호텔 반대하시는 분들, 학부모 의견 들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많은 사람을 전부 다룰 초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빠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앞으로 경청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규제개혁을…… 포장돼서 규제가 폐지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업체가 47.4%, 근로자의 51%가 집

중되어 있습니다.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고 사람이 몰린다면 또다시 지방이 텅텅 비게 됩니다.

수도권 규제는 좋은 규제입니까, 나쁜 규제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을 잘라 가지고 좋은 규제, 나쁜 규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박완주 의원 다시 여쭙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쓸데없는 규제 영역에 수도권 규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그 규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정말 풀어야 할 규제는 50년 동안 국민 재산권을 제한한 낙후된 탄약창 주변 군사보호구역의 합리적 해제입니다.

잠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전국적으로 9개의 탄약창 주변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미 50년 전보다 시설현대화를 수백억 들여서 했습니다. 탄약창 주변 지역 규제 현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최소한의 보호구역만 남기고 규제 완화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탄약창 주변에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불편이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박완주 의원 잠깐 또 자료화면 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후에 한 인터뷰입니다.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 맞지요?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말씀 하신……

○박완주 의원 그런데 최근 공기업 중 84개 기관에서 114명이 그 기관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새누리당 당직자, 국회의원, 대선 캠프 출신 이런 분들을 인사했습니다.

낙하산 인사 아닌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공공기관장은 전문성과 리더십, 비전 등을 고려해서 각 공공기관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절차를 거쳤지만 이미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만약……

○**박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 전날에 동서발전의 상임감사 임명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육사 출신에 국방부장관 보좌관을 지내고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SNS 자문위원장 하셨던 분입니다. 발전 관련된 경력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기본적으로 낙하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

○**박완주 의원** 보은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해서 추천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앞서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리더십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심의한 결과를 공운위를 통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지금 부총리께서는 절차상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어느 경험한 번도 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부총리님,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는데 정작 끝내야 할 것은 낙하산 파티를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 말씀대로 기관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의 절차상 최대

의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분을 모시도록 하고 또 그분을 기관장으로 임명한 이후에도 저희가 9월에 중간평가를 통해서 그분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분이 설령 그러한 시비가 없던 분이라 하더라도 성과가 나쁘면 해임건의를 하게 되고 설령 그런 논의가 있는 분이라도 성과가 좋으면 오히려 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현재 정부는 방만 공기업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자 최고 CEO는 낙하산 보은인사를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불이었습니다. 2006년 2만 불에 첫 진입한 후 7년이 지났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진입한 기간을 보면 독일이 4년, 일본이 5년, 선진국 평균 소요기간이 8.7년이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딱 1년 남은 셈입니다.

내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3만 불 시대 진입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빨리 올라서도록 경제의 체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혁신을 해서 빨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예단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정부에서 그러면 3만 불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또한 3만 불에서 4만 불까지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3만 불에서 4만 불가는 데 단 3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선진국 평균 5.6년입니다.

3만 불도 현재 어려운 속에서 4만 불까지에 대한 계획은 또 혹시 갖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번 2월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세운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747정책 실패했는데 박근혜정부의 쌍둥이 같은 우리 474정책 정말 국민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우리 성장동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일이고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완주 의원** 맞습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드레스덴 선언에서도 북한과의 협력교류 강화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서 남북경협과 북방경제협력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취지에 동감합니다.

○**박완주 의원** 그런데 이번 드레스덴 선언은 박근혜정부의 남은 4년 안에 실천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 과제로 설정한 건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꼭 이번 정부에서도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통일시대를 내다본 중장기 대책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에 보면 북한의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5·24 조치로 인해서 대북 신규투자 불허하고 있는데 새로운 농업교류, 신규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서 민족의 이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이런 협력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주 의원** 5·24 조치로 인해서 드레스덴 선언, 사실은 실현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24 조치 해제를 위한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는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그 정도 수준입니까? 비핵화 정도 요구하는 건 아니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물론 비핵화는 우리가 지금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5·24 조치 없이, 사실은 드레스덴 선언이 이 정부에서는 5·24 조치의 전향적 해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향적으로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선제적으로?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5·24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차근차근 또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것과 다른 별개로 할 수 있는 대북사업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사업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지난 정부부터, 2006년부터 추진해 오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현재 멈춰 있습니다.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은 저렴하게 가스 도입해서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개발에 북한을 참여시키면 북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 물꼬 트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주 의원** 혹시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grid) 들어보셨습니까? 총리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국무총리 정홍원** 예, 말씀 들어 봤습니다.

○**박완주 의원** 어떤 내용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동북아의 상호교류와 발전,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포괄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전기를 함께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아홉 개 국가가 유럽 슈퍼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스코틀랜드의 풍력발전기, 독일 태양광 패널 다 연결해서 함께 전력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에서 중국, 일

본, 러시아, 몽골까지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성공하려면 북한 참여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에 이런 동북아 슈퍼그리드 참여 제안을, 제안할 의향 혹시 없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서 신뢰가 형성되어 가고 대화가 더욱 진전되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작년 3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TPP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이다가 8월 부총리께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돌아섰지요? 이렇게 정부 입장이 급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현재 TPP에 관한 입장은 저희 TPP 가입 유무, 가입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TPP에 대해서 양자 협의를 저희가 실시한 이유는 현재 TPP가 세계 통상 질서의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진행되는 TPP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양자 협의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 2012년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TPP에 들어가면 중국이 느낄 배신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산업부 보고서에도 TPP 가입 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가 현재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중국의 변화가 상당히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관측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의 TPP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 한중 관계에 저는 큰 변화가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한중 또는 한중일 FTA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TPP에 관한 논의가 우리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가입하

고 참여의……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께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완주 의원** 아, 그것은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입은 참여와 달리 우리 이해를 반영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가입을 하는 것이고 참여는 함께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현재 늦게 들어가면 그 비용을 들여야 되고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TPP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현재 있는 TPP의 전략상 현재 TPP 내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입의 형태라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차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완주 의원** 그러면 TPP 가입 12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하고 일본뿐입니다. 결국 이 TPP는 한일 FTA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TPP는 지금 박완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마디로 새로운 통상 질서로 이해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단순한 시장의 확대가 아니라 TPP를 통해서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규범의 장이 마련된다는 측면과 또 이 지역 내에서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연계성 또 어떻게 보면 TPP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통상 질서에 대한 각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TPP에 관해서 어떤 가입의 시기라든지 또는 가입 유무를 결정하지 않고 이런 동향을 예의 주시해 본 다음에 양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우리가 한일 FTA, 2005년 이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하고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TPP는 다자간이지만 개별 FTA하고 같은 효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입하게 되면 한일 FTA 효과가 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가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올해 말에 쌀시장 개방할지 결정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관세화로 인한 전면개방할지 필리핀처럼 MMA 물량증가로 관세 유예할지 선택해야 되는 것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완주 의원 말씀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시다시피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자 또 농가의 아주 가장 큰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또 농업인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관세율을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자면 요구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수입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따져 보고, 그다음에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데 이것을 웨이버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이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가능성 이것들도 찬찬하게 다시 한 번 따져 봐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쌀산업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세화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혹시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방 없는 현상유지가 가능하고 개방할지 말지 협상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가 논의를 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확인하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TPP 가입할 때 혹시 기존 참가국들이 쌀 관세를 요구하면 가입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WTO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쌀 관세화 이것하고 FTA에서 이런 쌀을 개방하는

것 이 문제는 다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TPP와 쌀 양허제외 이것은 별개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TPP에 설령 가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한다……

○박완주 의원 우리 농민들이 말씀하신 것 100% 믿어도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한중 FTA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양허제외 품목이 1200개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농산물 중 생산액 기준 92%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330개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썄요,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부가 그동안 분석한 결과라든지 농업계의 바람 그리고 그동안의 통상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산업통상부와의 협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숫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도 대략 추가로 양허제외 품목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충분하다고 장관님이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썄, 그런 숫자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직도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고 다만 농수산업의 영세성이라든지 민감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초민감 품목군에 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또 대중국 협상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한중 FTA로 우리 농민이 피해입어 생산기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을 7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좋은 기업 잘 데려와야 합니다.

규제 개혁 추진할 때 좋은 규제 없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 부채 절감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경영 이루어 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 협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5·24 조치 해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박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 의원(257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욱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개시 재석 의원(126인)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도읍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미희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영우 김영주
 김용태 김을동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춘진 김태원 김한표
 김현 김희선 김희국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문대성 문재인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상은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서용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성범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제세 유승민 유은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욱
 윤호중 은수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전순옥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조현룡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하태경
 한명숙 홍문종 홍의락 홍종학
 황인자 황진하

○속개시 재석 의원(71인)

강기윤 강동원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도읍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세연
 김승남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재윤 김정록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한표 김현숙
 김희국 노영민 문정림 민홍철
 박명재 박병석 박윤옥 박혜자
 백재현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동우 안덕수 안민석 염동열
 오병윤 유대운 유승우 유인태
 윤명희 윤재욱 윤후덕 은수미
 이완영 이이재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철우 이한성 임수경 정수성
 정진후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한명숙
 홍문종 홍일표 황인자

○산회시 재석 의원(59인)

강기정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김광림 김민기 김성곤 김을동
 김장실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흠 김한표
 김현 문대성 문희상 민병주
 박병석 박완주 박윤옥 박지원
 박홍근 백균기 부좌현 신계륜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은수미 이강후 이상규 이상직
 이에리사 이운룡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오 이종걸 이주영
 이채익 이춘석 이현승 이현재
 전병헌 정성호 진선미 진성준
 진영 홍영표 황인자

○출장 의원(3인)

류성걸 이병석 정희수

○청가 의원(11인)

김광진 도종환 류지영 박성효
 안철수 안홍준 유성엽 이상민
 이상일 장하나 조명철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
 사무차장 지성배
 의사국장 전상수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홍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주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출석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 진 현
공정거래위원회장 노 대 래
금융위원장 신 제 윤

【보고사항】

○의안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4. 4 정부 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 발의)

(2014. 4. 4 한명숙 · 양승조 · 이석현 · 김경협 · 배재정 · 김우남 · 정호준 · 김광진 · 장하나 · 조정식 · 원혜영 · 최동익 · 진성준 · 윤관석 · 박남춘 · 김재윤 · 우원식 · 이용섭 · 배기운 · 정세균 · 홍영표 · 백재현 · 윤후덕 · 정진후 · 임수경 · 이원욱 · 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윤명희 · 이완구 · 최봉홍 · 황주홍 · 서용교 · 이만우 · 류지영 · 송영근 · 이에리사 · 김현숙 의원 발의)

**4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선동 · 김미희 · 김영록 · 김재연 · 김춘진 · 박민수 · 오병윤 · 이상규 · 이석기 · 이학영 · 주승용 의원 발의)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이종걸 · 정세균 · 김영록 · 추미애 · 민병두 · 이상직 · 이학영 · 강기정 · 김기준 · 유승희 의원 발의)

**4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광진 · 김성곤 · 김승남 · 박남춘 · 배기운 · 부좌현 · 안철수 · 유성엽 · 이목희 · 정성호 의원 발의)

**4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 발의)**

(2014. 4. 4 노철래 · 강기윤 · 강은희 · 경대수 · 길정우 · 김세연 · 김재원 · 김태원 · 김한표 · 김현숙 · 박상은 · 박윤옥 · 손인춘 · 염동열 ·

윤상현 · 유재중 · 윤영석 · 윤재옥 · 이우현 · 이운룡 · 이완영 · 이철우 · 홍문중 · 홍지만 의원 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이노근 · 정희수 · 함진규 · 이철우 · 김태원 · 정문헌 · 김종태 · 이만우 · 윤명희 · 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태원 · 이낙연 · 문대성 · 박성호 · 강기윤 · 이명수 · 신동우 · 이만우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태원 · 이낙연 · 문대성 · 박성호 · 강기윤 · 이명수 · 신동우 · 이만우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이노근 · 정희수 · 함진규 · 이철우 · 김태원 · 정문헌 · 김종태 · 이만우 · 윤명희 · 김상훈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문병호 · 전순옥 · 배기운 · 김재윤 · 박남춘 · 김기준 · 한정애 · 정성호 · 김성곤 · 장하나 · 이상직 · 최민희 · 민홍철 · 이학재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조현룡 · 이노근 · 염동열 · 박명재 · 함진규 · 김상훈 · 이한성 · 안종범 · 이채익 · 이운룡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태원 · 이낙연 · 문대성 · 박성호 · 강기윤 · 이명수 · 신동우 · 이만우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4. 4. 4 김태원 · 이낙연 · 문대성 · 박성호 · 강기윤 · 이명수 · 신동우 · 이만우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태원 · 이낙연 · 문대성 · 박성호 · 강기윤 · 이명수 · 신동우 · 이만우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14. 4. 4 문병호 · 전순옥 · 김기식 · 부좌현 · 진선미 · 안민석 · 홍종학 · 정성호 · 이해찬 · 김재윤 · 김미희 의원 발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태원 · 이낙연 · 문대성 · 박성호 · 강기윤 · 이명수 · 신동우 · 이만우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태원 · 이낙연 · 문대성 · 박성호 · 강기윤 · 이명수 · 신동우 · 이만우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김태원 · 이낙연 · 문대성 · 박성호 · 강기윤 · 이명수 · 신동우 · 이만우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박대출 · 강기윤 · 김세연 · 김을동 · 김재경 · 문대성 · 염동열 · 전하진 · 정갑윤 · 홍문종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문병호 · 이상민 · 전순옥 · 윤관석 · 김재윤 · 부좌현 · 윤호중 · 김승남 · 정호준 · 최원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문병호 · 이상민 · 전순옥 · 윤관석 · 김재윤 · 부좌현 · 윤호중 · 김승남 · 정호준 · 최원식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우윤근 · 부좌현 · 이원욱 · 강창일 ·

이춘석 · 오영식 · 김성곤 · 노영민 · 노웅래 · 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이목희 · 최동익 · 양승조 · 김용익 · 노영민 · 윤관석 · 진성준 · 배재정 · 홍영표 · 우원식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4. 4. 4 오제세 · 부좌현 · 서영교 · 박남춘 · 장하나 · 김성곤 · 김미희 · 유성엽 · 황주홍 · 배기운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성준) 인사청문 요청안

(2014. 3. 18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서면질문서 제출

통합창원시 광역소방사무에 대한 재정특례 등과 관련한 질문서

(2014. 4. 4 강기윤 의원 제출)